

## 韓·美 방산협력 —— 주요 발자취와 과제 진단

● 嚴致賢 本誌 주간

**한국**의 방위산업은 1969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선포와, 1971년 3월 주한 美 제7사단의 지상철수 등으로 더이상 미국에 의존할수 없다는 판단아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건설의 거보(巨步)를 내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소요군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본병기는 충족되었으나, '80년대 이후 여러 방산업체의 가동율은, 일반 제조업체의 가동율 80%에 비해 현격히 저하된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첨단무기의 연구개발에서는 한결 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역사적, 지정학적 여건을 분석해 볼때 생존을 위협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고도무기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선진화된 강대국의 구형 무기를 지난 20년동안 충족시킨 결과밖에 될수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자주국방 역량을 재 응집시켜 국내기술의 연구개발 및 유리한 조건에서의 기술도입을 통해 방위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한다면, 2천년대를 향한 자주국방은 물론 자유세계 진영의 보호자로 발전할수 있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은 곧 민족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防産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염출과 전문 기술인력의 수급, 수요 제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간 방산협력에서 대두된 현안들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으로, 다시금 실마리를 찾아내고, 전력질주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는 초석이 될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제는 '70년대 미국의 일방적 지원하에서의 발전이라는 형태에서 벗어나 '90년대는 양국간의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통해 안보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적인 시기에 한미 방산협력의 배경과 해결해야할 중요 문제점을 통해 우리의 자세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韓·美** 방산협력은 1953년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후에 대동하여, 10년 동안 기본병기를 포함한 일반 물자 등이 무상으로 원조되었고, 1970년 대외군사차관 제공과 병기의 유상판매, 방산건설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며, 1986년까지 FMS(대외 군사판매)차관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국의 일방적 지원 시대는 종결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원에서 협력으로, 협력에서 요구를 해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해 볼때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예기치않은 집요한 요구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는 1980년대 한국의 주변정세와 북한의 군사비 증가,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 유지, 한국의 정치·경제발전, 방위산업 능력, 동구권의 체제변화와 소련의 개혁 등을 감안

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1986년 FMS(대외 군사판매) 차관 제공이 종결된 결정적 요인은 1985년 한국의 경상수지가 46억1천7백불의 흑자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서 對美 무역수지는 한·미간의 무역 불균형이라는 통상마찰의 형태로 현재 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미국 측에 한국은 외부의 지원없이도 방위력을 갖추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시장을 잠식하는 경제적 경쟁자로서 인식하게된 것이며 이는 곧 한국에 대하여 高부가가치의 방산물자를 판매,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경제적 대상국가로 부상시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국제적 입지의 성과로 분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은 미국이 NATO 동맹국들과 일본에게 방위역할과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걸프전 참전 요구와 방위비 분담을 요구 하였으며, 이것이 SCM(한미 안보협의 회의)에서도 선결의제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두드러진 현상은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 체결, 연합 방위력 증강계획(CDIP)의 확대, 미군 항공기 정비지원 확대, 주한 미



미국과의 우호증진과 대화를 통하여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아감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자주국방 기반조성과 국제 방산협력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군 유지비 분담 확대, 또한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협력 측면에서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희망 등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은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무기개발과 생산사업을 축소하되 국제적 강대국으로서 군사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수/방산의 첨단기술 개발에 총력을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국방정책을 한국과의 방산협력에도 적용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 방위분담 차원에서 한국의 방산능력 강화는 미국의 국익에 직결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으로의 무조건적인 군사기술의 이전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미국의 경쟁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80년대 이후 방산협력에서 한·미간의 현안(懸案)으로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남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이전에 있어서, 한국의 방산육성 초기에는 적극적인 협력으로 TDP(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면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이전 기피 경향이 농후하여 '70년대 5백47건, '80년대 중반까지는 3백34건이던 것이 '87년 이후부터는 전혀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상호 구매문제에서도 이를 제약하는 BAA(미국産 구매법), BOPP(국제수지 개선계획) 등의 법규들에 국방부 소요물자 및 용역에 대한 국내조달원칙(또는 우선)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법의 적용 기준에서 면제되지 않은 외국 정부나 기업은 응찰가 산정에서 차별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절충교역(Offset)은 오늘날 국제간 무기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가는 데도, 미국은 한국이 1983년부터 해외무기 구매시 적용하고 있는 절충교역을 미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어 모순점

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3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미국의 원천기술/장비를 한국 방산업체에서 수출시 순수수출가의 8%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45일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동의절차와 NTA(不판매 보증서) 제도를 구매국이 미국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통제 또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안보지원 의지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과 방위산업 건설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해주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1971년 미국 콜트社와의 M-16소총 공동생산, 1976년 500MD 헬기와 F-5E/F 공동생산 등을 비롯해 도입된 기술자료 묶음중 62% 정도가 '70년대에 제공되었음을 보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경제자립 기반조성과,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한 해외 수출시장 잠식 등이 크게 작용해 한국이 「경쟁대상국」이라는 판단이 확고해져 생겨난 문제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양국 정부의 협상 창구인 SCM과 민간 차원에서의 '86년 제1차 한미 방산회의 이후 매년 양국 업체간 진지한 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 타결해나감으로써 미국 정부의 국방정책 개념이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태도는 1986년 美 의회에서 NATO 동맹국과의 방산 공동개발시 미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토록하는 법안이 수정되어 1987년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이스라엘, 호주, 이집트까지 확대한 것은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을 인정하고 무기생산에 있어서 협력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동연구개발로서는 SAM(지대공 유도탄) 유도기술과 항만방어체계, 탄약 저장 및 폭발물 안전에 관한 공동연구 등이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정부와 국민의 화합으로 방위비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소요군의 단기 전력증강만이 가능하며, 이것은 불행했던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20차 SCM에서 DTIC MOU(한미 방산기술협력협정)체결은 미국이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위한 첫걸음이며, 최근(1991년 11월 6일) 워싱턴에서 양국간의 PAS(특히 비밀보호협정) 가서명은 NATO 동맹국과 일본에 국한된 체결 내용을 확대한 것으로서 지난 '87년부터 4년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적 발명 기술의 비밀을 교환할 만큼 국방 분야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는 증거이며, 미국 국방정책의 변화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에서 출발하여 '70년대 중반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을 시작한 이래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현재의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던 것은 미국의 절대적 지원에 기인된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를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생존권 보존과 경제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하고 군사 모험주의자들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절대적인 국방우위로 가능한 것입니다.

국방우위를 위한 방위산업의 발전은 정부와 국민의 화합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방위비의 지속적 확보 및 유지를 통한 소요군의

단기 전력증강 실현만이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오인과 경제적 투자전환을 빌미로 한 국방비 삭감 주장, 방산업체의 민수 분야 적극 투자 가치성이 고조되고, 방산 분야의 참여의욕이 상실되어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은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막대한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방위산업을 당장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한·미간의 우호증진과 협력으로 추진하되, 자성(自省)의 소리를 높여 자체적으로는 국방연구개발을 확대해 무기체계의 개발 및 성능개량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의 공동생산/개발을 통한 기술협력을 모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존도를 과감히 탈피, 국제 방산협력의 다변화를 감안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은 곧 민족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며 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염출과 전문 기술인력의 수급, 수요 제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두된 현안들을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으로, 다시금 방산협력의 실마리를 찾아내고, 전력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